

호남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가장 큰 애로는 인력 확보”

■ 중기중앙회, 지방 중기 지원정책 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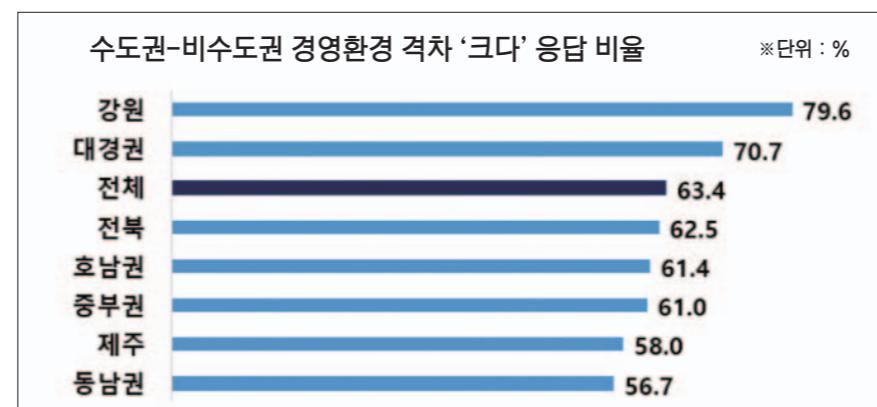
교통·물류·입지 여건 등 수도권과 경영환경 격차 커
수도권 99.5% “지방이전 계획 없다”…직원 기피 최다

호남권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수도권 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확보와 물류·입지 여건 등 구조적 제약이 여전히 지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77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비제조업은 5인 이상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는 수도권 203개사, 비수도권 569개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수도권 중소기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영환경 격차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3%였다. 반면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격차가 크다’는 응답이 63.4%에 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체감 인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호남권 중소기업 역시 수도권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호남권 중소기업의 61.4%가 수도권과의 경영환경 격차가 ‘크다’고 응답해 비수도권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강원

지 않는 이유로는 ‘기존 직원의 지방 이전 기피’가 47.0%로 가장 많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거리 증가’ 44.6%, ‘물류·교통·입지 조건 악화’ 32.7%, ‘인력 확보의 어려움’ 28.7%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체감도가 낮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 지원정책에 대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40.4%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지방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43.6%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중앙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53.5%로 가장 높았고, ‘투자·금융 접근성 어려움’ 43.9%,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 열악’ 33.0%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 의지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기업 203개사 가운데 99.5%가 ‘지방 이전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방 이전을 고려하

부족(36.7%)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 과제로는 ‘인력 확보 지원’이 47.5%로 가장 많이 꼽혔다. ‘투자·재정 지원 확대’도 46.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6.4%에 달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는 인력 확보이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기로하는 요인 또한 기존 직원의 지방 이전 기피로 나타났다”며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지원금 확대를 포함해 종합년총,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광주전남 주요대학 10곳과 이차전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맞춤인재 양성

도, 광양시·나주시·지역 대학 10곳 등과 업무협약
전남 산업·광주 연구 결합 ‘교육·현장·취업’ 연결

전남도는 11일 광양시·나주시, 광주·전남 주요 대학과 이차전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통·조성에 필요한 인력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정부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정책과 특화단지 유통·조성에 필요로 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통·조성에 필요로 하는 인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남도는 원료소재 산업과 항만·물류 인프라가 접촉한 전남의 산업 경쟁력을 광주의 교육·연구 역량을 결합해, 지역 안에서 ‘교육·현장·취업’으로 이어지는 이차전지 인재 육성체계를 구축하는데 초

점을 맞췄다.

협약 내용은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 △입주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인턴십 확대 △원료소재·재활용·차세대 배터리 분야 공동 연구와 기술교류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과 광양만권 취업 연계 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화단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전문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공급해 지역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국가 핵심 거

“핵심 특례 제외 땐 허울뿐인 통합…정부 결단을”

광주상의, 대거 불수용에 우려…국가 균형발전 강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들러싼 중앙부처의 대규모 특례 불수용 방침에 대해 지역 경제가 강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밝힌 데 대해 행정통합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각 체제 속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 시·도민의 숙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386개 조문 중 119개 특례가 불수용 대상에 오르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 인공지능·반도체, 항만·물류, 국가산업단지 육성 등을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임에도 형평성과 전국 혁신을 이유로 특례를 배제한 것은 지역 현실과 국가 전략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핵심 특례

가 제외될 경우 행정통합은 실질적 권한과 주권력이 없는 ‘허울뿐인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해온 5급 3특 자치분권·균형발전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 중앙부처 판단을 넘어선 법정부적 조정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분명한 정책 의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안신걸 상근부회장 선임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11일 개최한 2026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안신걸 신임 상근부회장(사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안신걸 신임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13일부터 3년이다. 안 부회장은 전남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시청 정보화담당관실, 전략산업국, 인

공지능산업국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약 30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이후 민간기업 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현장에서 산업과 기술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공직 재직 시절에는 인공지능·ICT·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정책 기획을 주도했으며, AI 접적단지 조성, 산업 거버넌스 구축, 기업 유



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기반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 기업과 함께 광융합산업을 육성해온 전문기관으로, 이번 상근부회장 선임을 계기로 산업·연구·행정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광융합산업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승기 기자 sky@

